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7, pp. 215-257
<https://doi.org/10.29212/mh.2020..117.21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1958년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요인 재고찰

—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

김민식*

1. 서론
2. 미국 극동지역 안보정책의 변화, 1954-1955
3. 전술핵무기 배치 논의와 결정, 1956-1957
4. 결론

1. 서론

미국은 1958년 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33년간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¹⁾ 한국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는 과정을

* 육군 소령(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본 논문의 완성과정에서 귀중한 논평을 해주신 네 분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Kristensen, Hans M. & Norris, Robert S., "A History of US Nuclear Weapons

다른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한·미 관계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분석했다. 우선 전술핵무기 배치를 아이젠하워(Dwight D. Eisenhower) 행정부의 ‘뉴룩정책(New Look Policy)’²⁾이 한국에 적용된 결과로 보는 연구들이 있다.³⁾ 이 연구들은 뉴룩정책의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가 재래식 무기 대신에 핵무기에 대한 의존을 한층 강화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군사원조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한국군을 감축하고자 했으며, 한국군 감축의 대가(代價)로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는 것이다.

반면 공산권의 위협에 대한 군사안보적 대응이 전술핵무기 배치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⁴⁾ 이 연구들은 미국

in South Korea”,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73-6 (2017), p. 349.

- 2) 뉴룩정책에 대해서는 권오신, 「아이젠하워 대외정책의 기초: ‘뉴룩(New Look)’ 정책과 ‘아이젠하워 독트린」, 『미국사연구』 제21집, 한국미국사학회, 2005, 141-173쪽을 참고; 뉴룩정책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Walker, David M., *Eisenhower’s New Look,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Limited War with a Case Study of the Taiwan Strait Crisis of 1958*, Ph.D. Dissertation,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004의 Part I·II를 참고.
- 3) 도널드 스톤 맥도널드(Donald Stone MacDonald) 지음·한국역사연구회 1950년대반 옮김, 『한미관계 20년사(1945-1965년): 해방에서 자립까지』, 서울: 한울, 2001; 박태균, 「1950-60년대 미국의 한국군 감축론과 한국정부의 대응」, 『國際地域研究』 제9권 제3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2000, 31-53쪽의 II장; 차상철, 「아이젠하워, 이승만, 그리고 1950년대의 한미관계」, 『미국사연구』 제13집, 한국미국사학회, 2001, 121-167쪽의 III장; 이재봉, 「남한의 핵무기 배치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평화학연구』 제9권 제3호, 세계평화통일학회, 2008, 23-44쪽; 박태균,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의 갈등」, 『역사비평』 통권 86호, 역사문제연구소, 2009, 82-112쪽의 3장; 이규원, 『이승만 정부의 국방체제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의 제5장; 정경두, 「미국의 동북아 위협인식 변화에 따른 한반도 내 전술핵무기의 역할 연구」, 『軍史』 第83號,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105-130쪽의 2장.
- 4) 이철순, 『이승만정권기 미국의 대한정책 연구(1948-1960)』,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의 제4장; 이연주, 『핵무기를 통한 예산절감 또는 안전보장?: 1958년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와 미국의 선택』, 서강대학교

정부가 1957년 6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국 내 전술핵무기 배치를 결정한 이후 한국 정부와 한국군 감축에 관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전술핵무기 배치 결정의 핵심은 재정절감이라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며, 전략적 방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군사안보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한다.

상술한 기존 연구들은 1950년대 중·후반 미국의 대한정책이 경제에 중점을 두었는지 아니면 안보에 중점을 두었는지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주장하는 바가 상이하다. 그렇지만 한·미 관계의 차원에서 전술핵무기 배치 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 연구들이 갖는 문제의식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그러나 실제 1950년대 미국의 정치 및 군사지도자들은 극동지역 안보정책을 수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최소한 한·미·일 3국의 안보관계를 고려했다.⁵⁾

1950년대 한·미·일의 안보관계를 국제연합군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미국 정부가 국제연합군의 권능(權能)을 매개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일체화’시키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을 규명했다.⁶⁾ 또한 주한미군과 그 핵전력에 대해 상세히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이연주·이근옥, 「재정절감과 동맹국 안전보장의 기로에서: 1958년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 『社會科學研究』 第23輯 2號,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126-156쪽.

5) 1950년대 초 미국의 대한정책이 일본 중심의 극동지역 안보체제에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었다는 관점은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8[2016]을 참고. 그리고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1950년대 중·후반 한·미·일의 안보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신옥희,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형성·영향·전환』,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의 제2, 3장을 참고. 또한 ‘유사동맹(quasi alliances)’의 관점에서 1960년대 이후 3국의 안보관계를 고찰한 연구로는 빅터 D. 차 지음·김일영·문순보 옮김,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0[2004]를 참고.

6) 쿠라타 히데야, 「일·미·한 안보 제휴의 기원: ‘한국조항’ 前史의 해석적 재검토」,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제3분과, 근·현대사편)』,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한국에 대한 전술핵무기 배치는 일본에 도입되어 있던 핵무기 철수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⁷⁾ 한편으로 이 사안이 미 육군을 전술핵무기를 보유한 펜토믹 사단(Pentomic Division)으로 재편하는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조명했다.⁸⁾ 이러한 연구들은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가 단순히 한국군을 감축하면서 한국에 배치된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목적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1958년 한반도에 전술핵무기가 배치되는 과정은 한·미 관계와 미·일 관계를 포함한 한·미·일의 안보관계와 극동이라는 지역적 차원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950년대 중·후반 미국의 대한정책이 검토 및 결정되는 과정을 전술핵무기 배치 문제를 중심에 놓고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가 이 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규명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문에서는 1954년부터 1957년까지 미국의 대한정책과 대일정책이 수립되는 과정을

서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47-89쪽; 츠치야마 지츠오, 「미일동맹과 한미 안보 협력」, 『한일공동연구총서』 Vol.2007 No.9,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7, 130-169쪽; 金基亨, 「韓国「戰時」における在日国連軍基地使用權をめぐる日米交渉過程: 朝鮮戦争から沖縄返還に至るまで」, 『韓日軍事文化研究』, 第16輯, 韓日軍事文化學會, 2013, pp. 101-131; 조진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있어서의 '사전협약'의 의미와 실제」, 『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국방연구원, 2016의 II장.

- 7) 피터 헤이스 지음고대승·고경은 옮김, 『핵 딜레마: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의 뿌리와 전개과정』, 서울: 한울, 1993의 제3장;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서울: 한울, 2003의 제3장. 그러나 이 연구들은 미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 8) 서울新聞社 編著, 『駐韓美軍 30年 1945-1978』, 서울: 杏林出版社, 1979의 III장; 피터 헤이스·류바 자르스카·윌던 벨로 지음·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엮음, 『핵무기는 가라!: 미국 핵전략과 한반도 평화』, 서울: 민중사, 1988의 2장. 펜토믹 사단에 대해서는 Bacevich, Andrew J., *The Pentomic Era: The U.S. Army Between Korea and Vietnam*, Washington, D.C.: National Defence University Press, 1986을 참고.

시간 순서대로 비교 검토했으며, 미 국무부에서 발간한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이하 FRUS) 1955-1957 XVIII Part1 JAPAN, Part2 KOREA에 수록된 문서들을 주로 참고했다.

2. 미국 극동지역 안보정책의 변화, 1954-1955

가. 일본 재무장 정책 재검토

1954년 3월 1일 발생한 ‘다이고후쿠류마루(第五福龍丸)호 사건’은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 내각의 기반을 뒤흔들기 시작했고, 일본 내에서는 미국에 대한 비난이 봇물 터지듯 밀려나오는 계기가 되었다.⁹⁾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내 원·수폭 금지 서명운동에는 연말까지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했다.¹⁰⁾

5월 20일 앨리슨(John M. Allison) 주일 미 대사는 이 사건의

9) 1954년 3월 1일, 미국은 마셜군도 비키니 섬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이때 실험지역 인근에서 참치 조업을 하고 있었던 다이고후쿠류마루호의 선원들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원들에게 피폭(被爆) 증상이 나타났고, 9월 23일 구보야마 무선기장이 사망했다. 미국은 피폭에 따른 증상을 인정하지 않았고, 보상액도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요시다 총리는 미국에 제대로 항의하지 않았다. (마고사키 우케루 지음·문정인 해제·양기호 옮김,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2012년』, 서울: 메디치, 2013, 188-191쪽).

10) 다나카 아키히코 지음·이원덕 옮김, 『戰後 일본의 안보정책』, 서울: 중심, 2002, 183쪽. 1950년대 미국이 일본에서 원자력평화이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의 평화이용에 대한 여론형성과정에 전략적으로 개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에는 이와 같은 일본 내 반미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서동주, 「일본 고도성장기 ‘핵=원자력’의 표상과 ‘피폭’의 기억」, 『일본학보』 제99권, 한국일본학회, 2014, 433-448쪽; 서동주, 「전후’와 폭력: 한국전쟁, 기지, 원자력」, 『日本研究』 제24집, 글로벌일본연구원, 273-304쪽을 참고.

영향을 분석하여 미 국무부에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서 앨리슨은 ‘일본이 안고 있는 핵에 대한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핵 독점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과 일본에서 중립주의와 함께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을 경고했다.¹¹⁾ 미국 정부는 피폭의 경험에 뿌리를 둔 일본의 반미(反美)주의와 평화주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었다.¹²⁾

1954년 8월 9일과 10일 앨리슨 대사와의 회담 석상에서 자유당(자민당의 전신)의 이케다 하야토(池田 勇人) 간사장은 일본이 정치적·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여 동·서 관계를 재검토하고 보다 유연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일본 내의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¹³⁾ 그리고 미국과의 쌍무관계에서 나름대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복합적인 포석이었다.¹⁴⁾

1954년 10월 25일 주일 미 대사관에서는 일본의 정치적 안정을 증대시키기 위해 미국의 대일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미 국무부로 발송했다. 10월 27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실시조정국은 ‘대일 목표와 행동에 관한 진척상황 보고’를 작성하여 일본 내에서 더욱 심각해지는 반미감정과 중립주의, 공산주의의 유혹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재무장 압력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대일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¹⁵⁾

11) 소토카 히데토시·혼다 마사루·미우라 도시야키 지음·진창수·김철수 옮김, 『미일 동맹: 안보와 밀약의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117-119쪽.

12) Guthrie-Shimizu, Sayuri.,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Cold War, 1945-1960”, p. Leffler, Melvyn and A. Westad, Odd,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ume I. Origi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 258.

13) 소토카 히데토시·혼다 마사루·미우라 도시야키 지음·진창수·김철수 옮김 (2005), 120-121쪽.

14) 신육회 (2019), 233쪽.

15) 소토카 히데토시·혼다 마사루·미우라 도시야키 지음·진창수·김철수 옮김 (2005),

미국 정부의 대일정책 재검토 작업은 1955년 4월까지 계속되었다.¹⁶⁾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4월 9일에 새로운 대일정책을 담은 문서인 NSC5516/1을 채택했다. 향후 5년간 미국 대일정책의 기본이 되었던 이 문서는 “일본은 주일미군기지가 일본 방위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전쟁 시 일본을 핵공격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안보문제에 있어서 미·일 간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지적했다.¹⁷⁾ 그리고 이러한 이해관계에 관한 문제는 일본 정부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해야 하며, 특히 “군사력 증대에 대한 압력을 가해서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¹⁸⁾

미국 정부가 엘리슨 대사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대일정책을 채택했지만, 미·일 관계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다. 1955년 당시 하토야마 이치로(鳩山 一郎) 내각은 과거 요시다 내각의 친미(親美)적 자세를 비판하면서 자주독립 노선을 내세웠다. 그리고 일본 내 반기지(反基地) 운동의 확산 분위기 속에서 1955년 7월 미국에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요구했다.¹⁹⁾ 대미관계에

121-124쪽. 1950년대 초 미국의 일본 재무장 정책이 수립되는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남균, 「미국의 일본 재무장 정책」,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다나카 아키히코 지음·이원덕 옮김 (2002)의 제2장을 참고.

16) 1955년 1월과 2월 엘리슨 대사는 재차 미 국무부에 전문을 보내 방위력을 중시하는 미국 정부와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을 우선순위로 두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미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신옥희 (2019), 233쪽).

17) “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9 Apr 55, *FRUS, Vol. XXIII, Part I JAPAN*, p. 56.

18) “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9 Apr 55, *FRUS, Vol. XXIII, Part I JAPAN*, p. 59.

19) 1954년 12월 10일 출범한 하토야마 내각은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이른바 ‘전방향 외교(multidirectional diplomacy)’ 정책을 표방했다. 1956년 12월 23일 이시바시 단잔(石橋 湛山)이 총리가 되어 하토야마 내각의 외교정책을 계승했다. 그러나 그는 취임 후 60여 일만

있어서의 자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안보조약 개정 움직임으로 표현한 것이다.²⁰⁾

이때 미·일안보조약 개정에 관한 교섭을 맡은 일본 외무성이 기존 안보조약의 문제점으로 정리한 내용 중에는 미국의 핵무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행 조약에서는 재일미군의 배치와 장비에 관해서는 미국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의향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일본에 들여올 수 있다는 논의가 생겨날 수 있다.”²¹⁾ 즉 하토야마 내각이 안보조약 개정을 요구한 배경에는 미국의 핵전략에 대한 고려가 중요한 맥락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1955년 8월 시게미쓰 마모루(重光 葵) 외무대신과 기시 민주당 간사장 등으로 구성된 일본의 사절단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이 문제에 대해 덜레스(John F. Dulles) 미 국무장관 일행과 논의했다. 8월 29일 열린 제1차 회담에서 덜레스가 행한 발언은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일본 내 반기지 운동에 이은 하토야마 내각의 미·일안보조약 개정 요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일본 내에서 핵무기가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중략] 그러나 만약 핵무기가 거부된다면, 공산주의 위협에 가장 중요한 역지력이 사라질 것이다. 미국은 그러한 상황에서 쉽게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소련의 방대한 영토에 훨씬 근접해있는 국가들은 심각한 위협에 처할 것이다.²²⁾

에 지병으로 사퇴했으며, 1957년 2월 기시 노부스케(岸 信介)가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Iriye, Akira and I. Cohen, Warr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Postwar World*, Lexington: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89, pp. 26-29; 63).

20) 신육회 (2019), 236쪽.

21) 다나카 아키히코 지음·이원덕 옮김 (2002), 161쪽.

22) “Memorandum of a Conversation, Department of State”, 29 Aug 55, *FRUS*,

이튿날 계속된 제2차 회담에서 덜레스 국무장관은 래드포드(Arthur W. Radford) 합참의장에게 발언을 양보하면서 일본의 방위계획에 관하여 조언을 부탁했다. 래드포드는 일본의 방위계획이 충분하지 않으며, 현재의 계획으로는 군사적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미 합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일본이 미국의 지상군 철수를 말할 때 그것은 전투부대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일본에 있는 7만여 명의 지상군의 절반 이상은 병참기능을 갖춘 지원부대이다. 일본의 계획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일본의 해군과 공군에 대한 계획도 완전하지 않다. 미군 철수를 위해서는 군사력에 대한 계획을 확대해야 한다. [중략]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따라 지상 전투부대의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일본의 지상군 증강보다 더 빨리 감축할 수도 있다.²³⁾

덜레스 국무장관과 래드포드 합참의장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엘리스 대사의 대일정책 재검토 권고 이후 NSC5516/1을 채택했지만, 극동지역에서 미국의 핵전략과 일본 재무장 정책을 그 즉시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덜레스는 일본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핵무기를 통한 억지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²⁴⁾

Vol. XVIII, Part 1 JAPAN, p. 92.

23) "Memorandum of a Conversation, Department of State", 30 Aug 55, *FRUS, Vol. XVIII, Part 1 JAPAN*, pp. 99-100.

24) 이종원은 미국 정부가 NSC5516/1을 채택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중심 국가로서의 일본에 대한 기대를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설명했다(이종원, 『6·25 전쟁과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의 변천』, 유영악·이채진 편, 『한국과 6·25 전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316쪽).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후 일본 정부

확실히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폭넓은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55년 초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러한 접근법을 제한전(limited war)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승인했다.²⁵⁾ 미국은 제1차 베트남전쟁의 디엔비엔푸 전투(battle of Dien Bien Phu) 직후인 1954년 8월 7일 대외정책의 기본 문서로 NSC5422/2를 채택했으며, 이 문서에서부터 공산진영이 아시아에서 ‘점진적 확대(creeping expansion)’을 추구함에 따라 제한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다.²⁶⁾ 그리고 1955년 1월 7일 채택된 NSC5501을 통해서도 국지적 침략(local aggression)을 억지하기 위해 ‘적절한 핵능력으로 무장된(equipped as appropriate with atomic capability)’ 군사력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²⁷⁾

와 있는 회담에서 여러 차례 군사력 증강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대일 정책을 채택한 것은 사실이나,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군사적 중심국가를 모색하기 전까지 일본 정부에 기존의 대일정책을 즉각적으로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이다. 마일 관계를 보다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려는 미국 정부의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 25) Gaddis, John L.,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1982], pp. 147; 169.
- 26) 제1차 베트남전쟁은 1946년 12월 19일 베트남(Viet Minh)군의 하노이 발전소 습격을 시작으로 1954년 5월 7일 디엔비엔푸 전투가 끝날 때까지 8년간 계속된 전쟁을 말한다. 베트남전쟁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사령부직할부대편』,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14-25쪽을 참고.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수군이 베트남군에 패배했다. 1956년 9월 미 태평양사령관 스텐프(Felix B. Stump) 제독이 한 영국군 장교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전투에서 미국은 나토(NATO) 국가들의 반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했으며 이후부터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지도자들은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미국이 약하다는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 능력과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심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Jones, Matthew D., *After Hiroshima: The United States, Race and Nuclear Weapons in Asia, 1945-196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 310).
- 27) David M. Walker (2004), pp. 74-77.

이렇듯 1955년으로 접어들면서 미국 정부는 전면 핵전쟁(*general nuclear war*)에 따른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능력을 강조했던 것에 더하여 전면 핵전쟁으로의 확전을 막기 위해 제한전과 국지전(*local war*) 단계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²⁸⁾ 그러나 같은 시기 일본 정부는 재무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일본 여론은 핵무기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일본의 재무장과 핵전략에 기반하여 극동지역 안보정책을 수립해 나가고자 했던 미국 정부의 노력은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강조해온 극동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나. 한국의 전략적 가치 제고

미국 정부가 대일정책을 재검토하게 되면서 대한정책에도 변화가 있기 시작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해외에 배치된 미군의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핵무기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이젠하워의 의도는 지역 방어를 위해 동맹국의 인력을 활용하면서, 미국은 핵무기로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었다. 즉, 미국과 지역 동맹국들 간의 군사적 분업을 추구했던

28) 그러나 이 결정이 곧 제한전과 국지전에서의 무차별적인 핵무기 사용을 의미했던 것은 아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의지를 보여준다면 도발 가능성이 희박해질 것이며, 도발 역지에 실패하여 제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면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John L. Gaddis, (2005[1982]), pp. 164-165). 그러나 핵무기를 사용하면서도 핵 전면전을 촉발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은 곧이어 비판에 직면했다. 이를 비판한 대표적인 인물이 키신저(Henry A. Kissinger)이며, 1957년 출판된 그의 저서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에 그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서는 헨리 A. 키신저 著 李春根 譯 『核武器와 外交政策』, 서울: 靑莢出版社, 1980의 제7장 '제한핵전쟁의 문제'를 참고.

것이다.²⁹⁾

그러한 맥락에서 아시아-태평양의 지역적 집단안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1955년 2월에 대한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담은 NSC5514가 승인되었다. 이 문서에는 한국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간의 지역적 연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사카타 야스요(阪田 恭代) 교수의 평가에 따르면, 이 문서는 ‘한·미·일 3국 안보관계의 출발(the origins of U.S.-ROK-Japan trilateral security relations)’를 의미했다.³⁰⁾

새로운 대한정책의 수립은 주한미군을 재배치하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주한미군 재배치는 극동지역의 군사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 내에서의 논의 과정은 미국의 대한정책이 대일정책과 매우 밀접한 관련 속에서 수립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1955년 6월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 육군참모총장과 헐(John E. Hull) 국제연합군 및 미 극동군사령관은 한국에서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은 철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투에 개입될 것이며, 일본 방위를 위해서도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주한미군 2개 사단을 모두 일본으로 철수하거나, 혹은 적어도 1개 사단은 일본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반면 래드포드 합참의장은 전면전 시 일본 방위는 일차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하는 반격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주한미군을 일본으로 전환한다면, 전환한 부대들은 일본 방위에 결

29) Dockrill, Saki, *Eisenhower's New-Look National Security Policy, 1953-61*, London: Macmillan Press, 1996, p. 70; John L. Gaddis (2005[1982]), p. 164.

30) 사카타, 「지역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기원: 1953-54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집단 안보정책과 한·미동맹의 형성」, 『軍史』 第57號,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79-82쪽.

정적인 기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³¹⁾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미국의 주요 안보담당자들이 기본적으로 대한안보정책을 대일안보정책과의 관련 속에서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³²⁾ 한국 방어와 일본 방어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들은 극동지역 전체에서 자유진영의 군사력 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으며, 그 핵심적인 원인으로 일본의 재무장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³³⁾

이러한 인식은 레드포드 합참의장의 발언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레드포드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관한 위의 논의가 있기 2개월 전인 1955년 4월 레이시(William S. B. Lacy) 주한 미 대사와의 매우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운 대화(highly personal and confidential talk) 자리에서 한국의 군사력 증강(build-up) 계획에 대해 질문받았다. 레드포드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레드포드는 ‘낡은 구식 장비를 신식으로 교체함으로써, 자유진영과 공산진영간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레드포드가 주로 의미하는 바는 항공기에 관한 것이었으나, 박격포와 같은 소형 장비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교체 계획에 중포(heavy artillery)류 장비가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레드포드는 우리의 중심 방어선은 한반도 후방과 더 나아가 일본의 후방인 오키나와까지 나아가간다고 밝혔다. 레이시는 레드포드가 언급한 ‘균형의 회복’은

31) 이철순 (2000), 263-264쪽.

32) 1950년대 중반 미국의 한국정책은 일본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미국의 정책 수립자들의 일반적인 정서였다. (차상철 (2001), 147-148쪽).

33) 월 사령관은 1955년 4월 21일 제254차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일본의 군사적 능력을 높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극동지역의 가장 큰 군사적 문제(greatest military problem in the Far East)’라고 평가한 바 있다.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245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21 Apr 55, *FRUS, Vol. XXIII, Part 2 KOREA*, p. 69).

단지 한반도 내부의 균형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 지역의 균형을 일컫는 것이라고 평가했다.³⁴⁾

래드포드 합참의장의 발언은 일본의 군비증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동지역 전체의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중심을 갖는 방어선을 이루고 있다는 설명은 이 두 국가가 하나의 작전지역 내에서 군사적으로 서로 연동하고 있다는 혹은 그래야 한다는 지정학적 인식을 보여준다.

극동지역 안보상황에 대한 미국의 주요 안보담당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종합해보면, 극동지역의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은 크게 세 가지가 될 수 있었다. 첫째, 주한미군 2개 사단의 전부 혹은 일부를 6·25전쟁 정전협정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극동지역 내 일본을 포함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증강하는 것이다.³⁵⁾ 둘째, 주한미군 2개 사단을 전부 혹은 일부 일본으로 전환하면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더욱 압박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일본 정부와 여론의 반대를 감수해야 한다. 셋째, 주한미군 2개 사단을 전부 한국에 그

34) "Memorandum From John W. Hanes to the Secretary's Special Assistant (O'Connor)", 19 Apr 55, *FRUS*, Vol. XXIII, Part 2 KOREA, pp. 67-68.

35) 이러한 대안은 헐의 후임자인 테일러(Maxwell D. Taylor) 사령관의 보고내용에서 확인된다. 그는 1955년 6월 2일 합참에 보내는 전문에서, 미군과 국제연합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고 '극동군사령부가 관할하는 다른 지역(elsewhere in FEC)'으로 배치한다면 정전협정의 제약에서 벗어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Telegram From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Taylor) to the Joint Chiefs of Staff", 2 Jun 55, *FRUS*, Vol. XXIII, Part 2 KOREA, pp. 108-110). 6·25전쟁 정전협정 제2조 13항 (ㄱ)목은 한반도로 반입될 수 있는 무기에 대해 규정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국경 외로부터 증강하는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반입을 금지한다. 단, 정전 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 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유형이 물건을 1대 1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연주·이근욱 (2015), 132쪽).

대로 주둔시키거나 혹은 그대로 주둔시키면서 동시에 증강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6·25전쟁 정전협정의 제약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결국 레드포드 합참의장의 안에 따라 2개 사단 모두 한국에 잔류시키는 방안으로 결정되었다. 이 결정은 기본적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덜레스 국무장관의 대(對)중국 압박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일본 국내의 반기지운동과 반미여론이 고조되어, 일본 본토의 미 지상군 유지가 정치적으로 곤란하게 된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³⁶⁾

특히 이러한 결정에는 미 국무부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머피(Robert D. Murphy) 국무부 정치담당 부차관은 이 사안에 대해 일본에 대규모 미군을 주둔시킨다면 일본 국민들의 분노와 반감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심리적인 측면에서 미국에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덜레스 국무장관과 로버트슨(Walter S. Robertson) 극동담당차관보 역시 머피와 의견을 같이하면서 레드포드 합참의장의 안을 지지했다.³⁷⁾

미국의 주요 정치 및 군사 지도자들은 최초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통해 극동지역의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미국이 상정했던 일본에 대한 재무장 요구 정책은 일본의 반발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일본 내 반미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극동지역 안보정책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³⁸⁾ 즉, 가능한 세 가지 대안들 중 세 번째 대안에 주목하게 된 것이다.

36) 이종원 (2002), 318쪽.

37) 이철순 (2000), 264-265쪽.

38) 최희식, 『전후 한일관계 70년: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 왔나』, 서울: 선인, 2016, 35-37쪽.

한편 이 시기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핵전략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1955년 6월 18일 정일권 육군참모총장은 워싱턴에서 맥클러킨(Robert J. G. McClurkin) 미 국무부 극동과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군은 미국 방어의 최전선으로서 그리고 만약 공산측이 핵공격을 한다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목적으로서 현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대한민국은 미국이 운항하는 ‘배 한 척에 모든 것을 실었으며’ 미국이 이끄는 대로 가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³⁹⁾ 한국 정부는 일본의 재무장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군사적 역할에 더욱 관심을 갖고 한국에 의존하도록 만들고자 노력했다.⁴⁰⁾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 요인을 활용하여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획득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⁴¹⁾ 그는 미국 측에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었다.⁴²⁾ 향후 일본이 한국에게 공격적인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에 대해 이승만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⁴³⁾ 그러나 그

39) “Memorandum of a Conversation, Department of State”, 18 Jun 55, *FRUS, Vol. XIII, Part2 KOREA*, pp. 114-116.

40) Gallicchio, Marc S., “The Best Defense Is a Good Offense: The Evolution of American Strategy in East Asia, 1953-1960”, I. Cohen, Warren and Iriye, Akira, *The great powers in East Asia, 1953-196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p. 70.

41) 이종원은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에 좌우된 정책이라는 비판은 당시부터 있었다. 그러나 신생 한국의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당분간은 일본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하는 한편, 미국의 지원 확보에 주력하는 전략이었다.”고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정책에 담긴 전략적 의도를 분석했다. (이종원, 「전후 한일관계와 미국: 한미일 삼각관계의 변용과 지속」, 이원덕·기미야 다다시 외 지음, 『한일관계사 1965-2015: I.정치』, 서울: 역사공간, 2015, 176쪽).

42) “이승만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 부통령에게 보낸 서한”, 1 Apr 54, 감사서한-13, 대통령기록관 사료.

43) 윤석정, 「이승만 정권과 일본의 재군비(1953-1955)」, 『일본공간』 제21호, 국민대

의 구상은 일본의 안보를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⁴⁴⁾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이승만 대통령의 인식은 1950년대 후반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국 정부 내에서는 미국의 극동지역 방공전선(防共前線)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⁴⁵⁾ 일본 방어를 위해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반드시 증강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미국 측에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⁴⁶⁾ 이승만은 1958년 국무회의에서 한·미·일의 안보관계 속에서 한국 정부가 안보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중략] 국방장관은 무슨 핑계든지 만들어서 미국에 가서 아는 사람들과 의논도 하고 서신으로도 연락하여 그들에게 ‘미국이 만일 델레스 씨의 정책대로 일본을 재무장시킨다면 공산당을 쳐내 보내고서도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그것은 원조를 더 받자는 술책이다. 국방장관은 그 꾀와 지혜로서 미국인에게 말하여 ‘한국만 붙들고 있으면 걱정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분부.⁴⁷⁾

학교 일본학연구소, 2017, 135쪽.

- 44) 박태균, 「반일을 통한 또 다른 일본 되기: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인식」, 『일본비평』 제3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114쪽.
- 45) 홍원표, 「일본의 잠재적 전력」, 『國防研究』 第1號,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58, 141-144쪽.
- 46) “이승만대통령이 L. L. Lemnitzer 미국방부참모총장에 보낸 서한”, 22 July 59, 17-미국육군장성(Chief of staff- L. L. Lemnitzer(렘니처)) 서한철, 대통령기록관 사료.
- 47) “대만사태에 관한 국제정세에 관하여,” 제97회, 『제1공화국 국무회의록』 1958.10.21, 김명섭·이희영·양준석·유지윤 편주, 『대한민국 국무회의록 1958』, 과주: 국학자료원, 2018, 362-363쪽.

한국 측의 입장과 인식은 앞서 살펴본 미군의 주요 정치 및 군사지도자들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1955년을 지나면서 미국 정부의 극동지역 안보정책은 핵무기와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여론의 반응을 바꾸려는 노력을 단행하기 보다는, 6·25전쟁 정전협정의 제약을 해소하면서 한국에 배치된 군사력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3. 전술핵무기 배치 논의와 결정, 1956-1957

가. 전술핵무기 배치 논의의 본격화

1956년으로 접어들면서 핵무기와 미군기지에 관한 일본의 여론은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 정부는 일본 대중에게 그들의 냉전 전략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1956년 1월 미 해외 공보처(USIA,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입장에 함께 서야한다는 입장은 전체 응답자의 29%였다. 그러나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의견은 48%를 차지했다. 그리고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설문에서 16%가 긍정적이었으며, 무려 51%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⁴⁸⁾

같은 달에 미 극동 육군 및 제8군사령부는 훈련 목적으로 오키나와에 있는 280mm 원자포를 일본 본토 내로 반입하게 해줄 것을 미 극동군사령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미 극동군사령부는 원자무기 반입이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48) Matthew D. Jones (2010), pp. 322-323.

승인하지 않았다.⁴⁹⁾ 미국의 정치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군사지도자들 역시 핵무기 관련 사안이 정치적으로 일본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6월에 있었던 오키나와의 ‘섬 전체 투쟁’은 일본 내에서 초당파적 반기지 운동으로 발전했으며, 반미감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영향을 미쳤다.⁵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국지전에 대비하기 위한 핵무장을 언급했던 NSC5501의 연장선상에서 대외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을 발전시켜나갔다는 사실이다. 1956년 3월 15일 채택된 NSC5602/1은 NSC5501보다 핵무기 전개 정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논의를 담고 있었다. NSC5602/1은 전면전 이외의 국지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모두 사용하기에 충분히 다재다능한 군사력(forces must be sufficiently versatile to use both conventional and nuclear weapons)’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기했다.⁵¹⁾

미국 정부는 극동지역에서 핵무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우려하면서도, 지역 안보정책 수립에 있어서 핵무장을 한층 더 강조하고

49) “Hq Far East Command UN Command, Command Report, Jan - Mar 1956”, 15 Dec 56, RG550,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Box 84, pp. 47-48.

50) 오키나와의 ‘섬 전체 투쟁’은 1950년대 오키나와에 미군기지 건설을 위한 일련의 토지몰수정책에 대항한 주민 측의 반대운동을 총칭하는 것이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오키나와의 토지문제에 대한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으며, 현지 조사를 마친 메르빈 프라이스(Melvin Price) 의원 일행은 1956년 6월 ‘프라이스 권고’를 발표했다. 권고에서 오키나와는 ‘세계적 규모에 걸친 방위의 불가결한 일부’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핵무기를 저장해서 사용하는데 외국정부의 제한도 없는’ 등의 이점이 있다고 했다. 이것이 투쟁에 발단이 되었다. (소토카히데토시·혼다 마사루·미우라 도시야키 지음·진창수·김철수 옮김 (2005), 149-152쪽).

51) David M. Walker (2004), pp. 77-83.

있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차 베트남전쟁의 결과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1차 대만해협(臺灣海峽) 위기로 불리는 1954년 금문도(金門島)와 마조도(馬祖島)에 대한 중국의 포격과 1955년까지 이어진 중국-대만 간의 위기 상황이 미친 영향이 컸다. 이때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덜레스 국무장관은 이 섬들이 대만 방어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을 고려한 바 있었다.⁵²⁾

이러한 배경으로 1956년 초부터 미국 정부 내에서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 배치된 군사력을 증강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미국의 주요 군사지도자들은 이때부터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테일러 육군참모총장은 1956년 1월 6일에 열린 국무부 관리들과의 회의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극동지역 안전 보장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연동을 강조하면서, 한국에 새로운 군사 장비를 도입하는 사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테일러 장군은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몇 대의 전투기를 한국에 배치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는 많은 수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군사령부가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비행기를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는 또한 정진협정 제 13항 (d)목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탱크와 신형 포병 전력의 한국에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280mm 원자포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⁵³⁾

국제연합군 및 미 극동군사령관 램니처(Lyman L. Lemnitzer)도 이러한 테일러 육군참모총장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1월 30일

52) John L. Gaddis, (2005[1982]), pp. 167-168

53) "Memorandum of a Conversation, Department of State", 6 Jan 56, *FRUS*, Vol. XXIII, Part 2 KOREA, p. 200.

테일러에게 보낸 전문에서 한국에 있는 적대세력과 미군 간에 존재하는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군에 의해 ‘핵 운반 능력을 가진 육군의 무기(*army weapons possessing an atomic delivery capability*)’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⁵⁴⁾ 그리고 렘니처는 6월 30일까지 미 제1기병사단(1만 명)과 군수지원부대(3만 3천명)만을 남기고 주일미지상군을 모두 철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미군이 일본에서 완전철수를 결정하기 전까지 지상군을 줄일 수 있는 만큼 가장 최소로 줄인다는 것이었다.⁵⁵⁾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주한미군에 신형 무기를 도입하는 사안에 대해 결심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후버(*Herbert Hoover, Jr.*) 국무장관 대리에게 보낸 전문에서 “새로운 유형의 무기를 장착한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키겠다는 우리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는지” 문의했으며, 후버는 아이젠하워에게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고 회신했다.⁵⁶⁾

1956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한국에 배치된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일본의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한층 더 진전되었다. 5월 23일 이 문제에 대한 미 국무부와 합참의 회의에서, 래드포드 합참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54) “Telegram From the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 (Lemnitzer) to the Department of the Army”, 30 Jan 56, *FRUS, Vol. XXII, Part2 KOREA*, p. 212.

55) “Memorandum From the Acting Director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 Affairs (Hemmendinger) to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 Affairs (Robertson)”, 19 Apr 56, *FRUS, Vol. XXII, Part1 JAPAN*, pp. 171-173.

56) “Memorandum From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President”, 3 May 56, *FRUS, Vol. XXII, Part2 KOREA*, p. 256.

레드포드 제독은 정전협정 13(d)항에 대해 문의하면서, 주한미군의 효율성을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위험(great risks)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레드포드 제독은 우리가 공군력을 철수시켜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일본인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본인들로부터 그들의 활주로를 연장하는데 동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⁵⁷⁾

레드포드 함참의장은 일본의 군사력이 충분히 증강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에 배치된 군사력 또한 정전협정의 제약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준비되고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런 점에서 그의 발언은 정전협정에 의한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극동지역의 군사적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이 한국에 보다 많은 군사력을 배치하여 일본의 재무장을 자극하려는 간접적인 목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1956년 7월 12일 제290차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윌슨(Charles E. Wilson) 국방장관은 극동지역에서 한국의 군사적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그는 일본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지역 안보정책에서 한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밝힌 구상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는 태평양지역 군사부문 재조직을 위한 새로운 계획에 합의했다. 이 계획이 실행되면 스템프 제독이 이끄는 하나의 태평양사령부가 수립될 것이다. 게다가 국제연합군사령부를 일본에서 한국으

57) "Memorandum on the Substance of Discussion at the Department of State-Joint Chiefs of Staff Meeting", 23 May 56, *FRUS, Vol. XXII Part 2 KOREA*, p. 271.

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것은 일본 내에 팽배해 있는 일본이 아직 점령되어 있다는 인식을 없애기 위한 국방부 차원에서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인식을 없애지 못하면 우리는 일본에서 우리의 지위를 잃게 될 것이다.⁵⁸⁾

이 계획은 이듬해에 실제로 실행되었다. 1957년 7월 1일 용산의 미 8군사령부 광장에서 도쿄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서울 이전식이 거행되었다.⁵⁹⁾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서울 이전은 이 사령부를 축으로 하는 미국의 지역전략에 의해 한·일 관계가 군사적으로 매우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⁶⁰⁾ 그런 점에서 미국의 대일군사정책이 처음에는 동아시아 전역(全域)을 위한 주요 군사기지였던 것에서 점차 군사작전을 위한 병참기지로 전환되었다는 평가는 한·미·일 3국의 안보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된다.⁶¹⁾

58)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290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12 Jul 56, *FRUS, Vol. XVIII, Part 1 JAPAN*, pp. 188-189. 물론 이러한 조직 재편에는 인력의 감축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일반적인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래드포드 합참의장은 여기에 더하여, 국제연합군사령부를 한국으로 이전함으로써 한국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극동군사령부를 해체하고 태평양지구사령부를 설치함으로써 일본이 그들 자신의 방어에 더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되기를 희망했다. (Matthew D. Jones (2010), pp. 308-309).

59) 서울新聞社 編著 (1979), 316쪽.

60) 李東俊, 「韓米日安保体制の歴史的展開と「国連の権能」: 1950-70年代における米国の対日及び国連軍司令部政策を中心にして」, 『日本研究論叢』 제28호, 現代日本學會, 2008, pp. 85-86.

61) Mott IV, William H., *United States Military Assistance: An Empirical Perspective*. Westport: Greenwood Press, 2002, p. 219. 이때 형성된 한·미·일 3국의 안보관계는 6·25전쟁 발발 70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참모장 질레트(Mark W. Gillette) 소장은 "한반도에서의 국제연합군사령부 활동을 보충하는 것은 도쿄 요코타 공군기지에 소규모로 존재하는 국제연합군사령부 후방기지입니다. 호주 대령이 이끄는 국제연합군사령부 후방기지의 국제 장교단은 일본에 전략적으로 지정된 7개의 국제연합군 기지에 대한 접근을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United Nations Command, Combined

1956년 9월 20일 제297차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향후 2년 동안 한국에 주둔하게 될 미군과 한국군의 최소 수준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여 제출할 것을 합참에 요청했다.⁶²⁾ 이에 따라 10월 11일 합참은 국방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합참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최소 수준을 현실에 맞게 결정하기 전에 취해야 할 첫 조치로서 주한미군과 장비를 ‘핵전력을 포함하여(to include atomic capable forces)’ 현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⁶³⁾

한편 11월 28일 이 문제에 대한 미 국무부와 국방부 간의 논의에서 국무부 극동과의 네스(Nes)는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할 경우 동맹국들 사이에 ‘심각한 파급효과(serious repercussion)’이 발생할 것을 지적했다. 그는 일본과 호주와 같은 국가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⁶⁴⁾ 1956년 초부터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리고 논의에 있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1956년 말까지

Forces Command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2018: *The Year On Pen*] *U.S. Military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9 Strategic Digest*, 2019, p. 57).

62)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297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20 Sep 56, *FRUS, Vol. XXIII, Part 2 KOREA*, p. 314. 이 회의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장기간 해외에 주둔하는 군대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 더욱 철군시키고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63) “Memorandum From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Secretary of Defense (Wilson)”, 11 Oct 56, *FRUS, Vol. XXIII, Part 2 KOREA*, pp. 322-325.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Nautilus Institute)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핵문제 전문가인 헤이스(Peter J. Hayes)에 따르면, 1956년 후반 존스홉킨스대학의 작전연구실(Operations Research Office)이 국방부에 제출한 자료들에는 한반도에 ‘원자탄 방벽’을 쌓는데 필요한 무기들을 분류 및 분석하고 있었다. (Operations Research Office, Johns Hopkins University, Semi-Annual Report 9:2 (July-Dec.31, 1956), contents page. (피터 헤이스 지음고대승고경은 옮김 (1993), 85쪽 재인용).

64) “Memorandum of Conversation”, 18 Nov 56, *FRUS, Vol. XXIII, Part 2 KOREA*, pp. 357-358.

국무부는 네스의 발언에서처럼 그것이 가져올 정치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었다.

나. 대일정책의 변화와 전술핵무기 배치

1957년 1월 일본 주둔 미 제1기병사단의 철수와 그것이 'Atomic Task Force'로 대체 된다는 일본 내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후 미국무부와 국방부는 그러한 결정을 부인하는 언론 발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본 내 사회주의자들의 비난을 멈출 수 없었다. 이 사건으로 기시 총리는 일본은 핵무기 보유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더 확고한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⁶⁵⁾

여기에 더하여 1월 30일에는 주일미군 병사가 훈련 도중에 일본인을 살해한 '제럴드 사건'이 발생했다. 덜레스 국무장관은 일관되게 사태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군을 비판하며, 일본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⁶⁶⁾ 이 제럴드의 행위를 두고 그것이 공무집행 중의 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 미국과 일본 정부는 대립했고 일본 여론은 격앙되었다.⁶⁷⁾

65) Matthew D. Jones (2010), pp. 327-329. 1957년 실시된 일본의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7%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핵무기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Endicott, John E., *Japan's Nuclear Option: Political, Technical, and Strategic factor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5, pp. 91; 93. (피터 헤이스 지음·고대승·고경은 옮김 (1993), 88쪽에서 재인용).)

66) "Letter from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Secretary of the Army (Brucker)", 21 May 57, *FRUS, Vol. XXVII, Part 1 JAPAN*, p. 306. 제럴드 사건은 1957년 1월 30일 일본 군마현(群馬県) 소마가하라(相馬原) 미군 훈련장에서 훈련장에 들어와 탄피를 줌고 있던 46세 여성 사카이(坂井)를 미군 병사 제럴드 3등 특기병이 사살한 사건이다. 미군은 이 사건이 '공무집행 중'에 있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미국 측 재판권을 얻고자 주장하면서 일본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영신, 『동아시아의 안보분업구조와 반(反)기지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224-225쪽).

67) 다나카 아키히코 지음·이원덕 옮김 (2002), 168쪽.

핵무기와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일본의 여론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현대화를 더욱 강력히 주장했다. 주일미군기지의 공군력과 전략핵무기로 충분히 역지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했던 덜레스 국무장관은 차츰 국방부의 의견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극동지역 안보를 위해서는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이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고려했을 때 보다 나은 대안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957년 1월 18일 미 국무부와 국방부 간의 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국방부가 나서서 공산진영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국방부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하면, 국무부와 국방부의 대표들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진영 내 국가들을 설득하는 자료를 만들기로 했다.⁶⁸⁾ 이 시점에서 덜레스 국무장관은 만약 국방부가 공산진영이 핵무기로 그들의 장비를 증강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핵무기 배치를 묵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1월 31일 제311차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보다 점진적으로 한국군을 감축하는 계획과 함께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안에 기초하여 극동지역 안보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발전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⁶⁹⁾ 이 회의에서 덜레스 국무장관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덜레스 국무장관은 결론적으로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새로운 유형의 무기 도입을 피하면서 동시에 한국군 감축 계획을 유지하는

68) "Record of Meeting, Department of State", 18 Jan 57, *FRUS, Vol. XXIII, Part2 KOREA*, pp. 388-389.

69)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311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31 Jan 57, *FRUS, Vol. XXIII, Part2 KOREA*, pp. 392-402.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요약했다. 하지만 만일 이러한 행동 방침을 취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한국군 병력을 급격하게 감축시키는 것보다는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7년 6월 13일 제326차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사안과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응하여 국제연합군이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다울링(Walter C. Dowling) 주한 미 대사와 램니처 국제연합군 및 미 극동군사령관에게 주한미군을 현대화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서는 한국군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⁷⁰⁾

이에 따라 6월 21일 관문점의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에서 국제연합군사령부 수석대표인 릿젠버그(H. L. Litzenberg) 장군은 정전협정 13항 (d)목의 공산 측 위반 혐의를 열거하고, 국제연합군사령부는 ‘상대적인 군사적 균형이 복구되고, 공산 측이 조치들을 통해 이를 준수할 의지를 표명할 때까지’ 해당 문단이 부과하는 제한에 더 이상 묶여 있지 않은 것으로 고려한다는 성명을 냈다.⁷¹⁾ 그리고 같은 날 다울링 주한 미 대사와 램니처 국제연합군 및 미 극동군사령관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주한미군의 현대화 그리고 이와 관련된

70) “Memorandum of Discussion at the 326th Meeting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13 Jun 57, *FRUS, Vol. XXIII, Part2 KOREA*, pp. 453-454. 이처럼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군 감축을 약속받기 위한 협상카드로서의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었다. 즉, 한국의 특수상황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피터 헤이스류바 자르스카윌든 벨로 지음-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역음 (1988), 51쪽).

71) “Editorial Note”, no date, *FRUS, Vol. XXIII, Part2 KOREA*, pp. 460-461.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⁷²⁾

이렇듯 1957년 6월에 미국 정부는 국제연합군사령부를 통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는데 있었던 정치적 제약을 제거했다. 이것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고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극동지역의 군사적 중심국가로서 한국을 공식화했다. 미국 정부는 극동지역에서 일본의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지역 내의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편으로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는 미 육군의 사단을 펜토믹 사단으로 재조직하는 움직임의 일부였던 측면도 있었다.⁷³⁾ 6월 27일 브루커(Wilber M. Brucker) 육군장관은 월슨 국방장관에게 보낸 비망록에서 한국에서 전술핵무기는 “미 제7사단과 제24사단이 원자력 무장사단으로 재조직될 때 배치되어야” 하며, “한국에서 군의 역지력을 늘리고 우리의 동맹 한국을 안심시키는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⁷⁴⁾ 그리고 7월 17일 래드포드 합참의장은 역시 월슨에게 보낸 비망록에서 “한국의 미 지상군 현대화는 제7사단과 제24사단을 ‘펜토믹 개념’으로 재조직하고, 군단형 부대로 재장비하는 것으로 완성될 것이다.”고 밝혔다.⁷⁵⁾

72)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21 Jun 57, *FRUS, Vol. XXIII, Part2 KOREA*, p. 460.

73) 미 육군은 핵무기의 지원을 받는 펜토믹 사단을 편성하여, 의회로부터 새로운 무기들에 대한 재정지원과 예산승인을 최대한 얻어내고자 했다. (피터 헤이스 지음, 고대승고경은 옮김 (1993), 85-86쪽).

74) “Memorandum From the Secretary of the Army (Brucker) to the Secretary of Defense (Wilson)”, 27 Jun 57, *FRUS, Vol. XXIII, Part2 KOREA*, pp. 464-465.

75) “Memorandum From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the Secretary of Defense (Wilson)”, 17 Jul 57, *FRUS, Vol. XXIII, Part2 KOREA*, pp. 467-468.

1958년 1월에 존스(Jones) 국무부 극동문제 담당 부차관보가 머피(Murphy) 국무부 정치담당 부차관에게 보낸 비망록은 전술핵무기 배치를 포함하는 주한미군의 현대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잘 보여준다.

1958년 1월 10일 열릴 국무부-합참 회의에서 당신이 한국군 병력 감축 문제를 주장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주한미군의 현대화와 관련된 우리의 계획을 한국 측이 받아들일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주제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제 어니스트 존과 280밀리 원자포가 한국에 곧 배치될 예정이다.⁷⁶⁾

존스의 발언은 확실히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가 본질적으로 한국군 감축에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그의 발언에서는 이 사안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그의 발언은 브루커 육군장관과 래드포드 합참의장이 월슨 국방장관에게 보낸 비망록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 방어와 펜토믹 사단으로의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전술핵무기 배치를 포함한 주한미군의 현대화 문제는 애초에 극동지역 전체의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군사적 불균형에 관한 우려는 본질적으로 일본의 재군비와 일본에서 미국의 핵전략이 부침을 겪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존스의 발언은 미국 정부가 극동지역에서 군사적 중심국가로서 일본을 포기하고 한국을 공식화해 나가는

76) “Memorandum From the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 (Jones) to the Deput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Murphy)”, 9 Jan 58, *FRUS, Vol. XVII, JAPAN; KOREA*, p. 425.

1954년부터 1957년까지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57년까지 일본 내에 있는 9개의 미군기지에 핵탄두를 이송했다. 그리고 1958년 1월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일본 내의 핵무기를 철수했다.⁷⁷⁾ 미국이 점령하고 있었던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전역에 있던 핵무기를 1957년부터 한국으로 옮겼던 것이다.⁷⁸⁾ 이러한 사실은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가 미국의 대한안보정책 차원에서만 논의 및 결정된 사안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일안보정책 변화에 따른 대한안보정책의 재판단 과정에서 이 사안이 결정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위탁하면서도 미국 정부의 재무장 요구가 야기하는 ‘냉전의 국내화’를 차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극동지역의 냉전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었다.⁷⁹⁾ 1950년대 미국 정부에 있어서 일본 정부와 일본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두면서 일본에게 극동지역 안보의 중요한 역할까지 부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다.⁸⁰⁾

일본 정부가 미·일 안보조약 개정과 미 지상군 부대의 철수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상황에서 일본을 극동의 전략적 거점으로 만들고자 했던 미국 정부의 구상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펜토믹 사단으로 미 지상군의 편제가 변화하면서 지상군의 일본 배치는 더욱 곤란하게 되었다.⁸¹⁾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했다. 주한미군 2개 사단의 한국 잔류, 주일미지상군의 완전

77) 피터 헤이스 지음고대승고경은 옮김 (1993), 87-88쪽.

78) 김일영·조성렬 (2003), 109쪽.

79) 최희식 (2016), 39-41쪽.

80) “Memorandum of a Conference With a President, White House, Office, Department of State”, 23 Jul 57, *FRUS, Vol. XXIII, Part I JAPAN*, p. 429.

81) 이종원 (2002), 318-319쪽.

철수, 국제연합군사령부의 한국 이전은 대일안보정책의 변화에 따라 대한안보정책을 다시 판단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결과물이었다.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내려진 결정이었다. 미국 정부는 일본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던 반미·반핵감정을 최대한 회피하면서도, 극동지역에서 핵에 기반 한 억지력을 확고히 유지하고자 했다. 이러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가 바로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였던 것이다. 한편으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재무장에 관한 관심과 노력을 우회적으로나마 자극하면서도⁸²⁾, 동시에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⁸³⁾ 1950년대 중·후반 미국 정부는 ‘일본’ 요인을 고려하면서 자신들의 냉전 핵전략을 극동지역에 적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82) 램니처 국제연합군 및 미 극동군사령관은 “한국군을 현대화하면 일본 자위대(Japanese self-defense forces)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따라가도록 자극하는 부수적인 이득(collateral benefit)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다. “CINCFE TOKYO JAPAN to the DEPTAR WASH DC”, 10 Mar 57, RG218, Records of Admiral Arthur. W. Radford 1953-57, 091 Korea 1955, p. 2.

83) 이시바시에 이어 1957년 2월 총리로 취임한 기시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일안보조약 개정 논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이 회담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이 태평양 방위라는 무거운 짐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환영받지 못하는 장소에는 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덜레스 국무장관은 “미군 병력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일본 정부에 달렸으며, 일본이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시 일본과의 절연(divorce ourselves from Japan)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Memorandum of a Conversation, White House”, 19 Jun 57, *FRUS*, Vol. XVIII, Part1 JAPAN, p. 374; Memorandum of a Conversation Between Secretary of State Dulles and Prime Minister Kishi, Department of State”, 20 Jun 57, *FRUS*, Vol. XVIII, Part1 JAPAN, p. 381; “Memorandum of a Conversation, Secretary Dulles’ Office, Department of State”, 21 Jun 57, *FRUS*, Vol. XVIII, Part1 JAPAN, p. 389). 미국 측의 단호한 대응은 이 회담이 한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포함한 주한 미군의 현대화 결정을 내린 직후에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4. 결론

1950년대 중반 미국의 주요 정치 및 군사지도자들은 한반도 전술 핵무기 배치에 대한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일본의 상황을 예의 주시했다. 미국의 핵전략과 일본 재무장 정책이 일본 정부와 여론의 부정적인 인식과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서, 이들은 일본에 부여한 군사적 부담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대일정책을 재검토했다. 그러나 극동지역의 안보상황을 고려한 미국 정부의 대외안보정책은 전술핵무기와 현지 우방국 군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따라서 일본에 대한 정치적 고려의 결과, 미국 정부는 극동지역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증강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일정책 변화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극동지역 내에서도 특별히 한반도에 도입된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극동지역 안보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일본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이 미국의 지역 안보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일본 방위를 위해 한국의 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논리로써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에 있어서 미국의 대일정책은 그 자체로도 근본적인 요인이었으며,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일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⁸⁴⁾

84) 6·25전쟁으로 탄생한 한반도 정전체제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봉쇄하고, 한국의 북진통일 시도를 방지하며, 일본의 우익전체주의를 봉쇄하기 위한 한국의 의도가 견지된 삼중봉쇄체제(三重封鎖體制)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6[2015]를 참고.

(원고투고일 : 2020. 7. 2, 심사수정일 : 2020. 11. 13, 게재확정일 : 2020. 12. 2.)

주제어 : 한·미·일 안보관계, 미국 극동지역 안보정책, 전술핵무기,
주한미군

<참고문헌>

1. 1차 사료

대통령기록관, 17-미국육군장성(Chief of staff- L. L. Lemnitzer(렘 니처)) 서한철.

대통령기록관, 감사서한-13.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5-1957 XVIII Part1 JAPAN*,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net Printing Office (1991).

_____,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5-1957 XVIII Part2 KOREA*,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net Printing Office (1993).

_____,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58-1960 XVII JAPAN; KOREA*,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net Printing Office (1994).

RG218, Records of Admiral Arthur. W. Radford 1953-57, 091 Korea 1955.

RG550, Records of United States Army, Pacific, Records of HQ, US Army, Pacific, Military History Office, Classified Organizational History Files, Box 84.

2. 단행본 및 논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사령부·직할부대편』,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http://uci.or.kr/G500:1310377-02012039533936>

金基亨, 「韓国「戦時」における在日国連軍基地使用権をめぐる日米交渉過程: 朝鮮戦争から沖縄返還に至るまで」, 『韓日軍事文化研究』, 第16輯,

韓日軍事文化學會, 2013, 101-131쪽.

<http://uci.or.kr/G704-SER000009034.2013.16..010>

김남균, 「미국의 일본 재무장 정책」,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_____,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
소, 2001.

<http://uci.or.kr/G901:A-0006017912>

김명섭,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6[2015].

<http://uci.or.kr/I410-ECN-0102-2017-910-000553726>

김명섭·이희영·양준석·유지운 편주, 『대한민국 국무회의록 1958』,
파주: 국학자료원, 2018.

<http://uci.or.kr/G500:1310377-02012051440844>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서울: 한울, 2003.

<http://uci.or.kr/G901:A-0006039847>

권오신, 「아이젠하워 대외정책의 기초: ‘뉴룩(New Look)’ 정책과 ‘아이
젠하워 독트린」, 『미국사연구』 제21집, 한국미국사학회, 2005,
141- 173쪽.

<http://uci.or.kr/G704-000538.2005.21..003>

남기정,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서울: 서울대학교출
판문화원, 2018[2016].

<http://uci.or.kr/G901:A-0006612895>

다나카 아키히코 지음·이원덕 옮김, 『戰後 일본의 안보정책』, 서울:
중심, 2002.

<http://uci.or.kr/G701:B-00099053457>

도널드 스톤 맥도널드(Donald Stone MacDonald) 지음·한국역사연
구회 1950년대반 옮김, 『한미관계 20년사(1945-1965년): 해방
에서 자립까지』, 서울: 한울, 2001.

<http://uci.or.kr/G901:A-0006008340>

마고사키 우케루 지음·문정인 해제·양기호 옮김,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2012년』, 서울: 메디치, 2013.

<http://uci.or.kr/G901:A-0006436465>

박태균, 「1950·60년대 미국의 한국군 감축론과 한국정부의 대응」, 『國際地域研究』 제9권 제3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2000, 31-53쪽.

_____, 「잘못 끼운 첫 단추: 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의 갈등」, 『역사비평』 통권 86호, 역사문제연구소, 2009, 82-112쪽.

<http://uci.or.kr/G704-000293.2009..86.003>

_____, 「반일을 통한 또 다른 일본 되기: 이승만 대통령의 대일인식」, 『일본비평』 제3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98-119쪽.

빅터 D. 차 지음·김일영·문순보 옮김,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0[2004].

<http://uci.or.kr/G901:A-0006071309>

사카타, 「『지역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기원: 1953-54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집단 안보정책과 한·미동맹의 형성」, 『軍史』 第57號,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29-87쪽.

<http://uci.or.kr/G704-001528.2005..57호.003>

서울新聞社 編著, 『駐韓美軍 30年 1945-1978』, 서울: 杏林出版社, 1979.

소토카 히데토시·혼다 마사루·미우라 도시아키 지음·진창수·김철수 옮김, 『미일동맹: 안보와 밀약의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5.

<http://uci.or.kr/G901:A-0006117104>

서동주, 「일본 고도성장기 ‘핵=원자력’의 표상과 ‘피폭’의 기억」, 『일본학보』 제99권, 한국일본학회, 2014, 433-448쪽.

<http://uci.or.kr/G704-000247.2014..99.032>

_____, 「전후'와 폭력: 한국전쟁, 기지, 원자력」, 『日本研究』 제24집, 글로벌일본연구원, 273-304쪽.

<http://uci.or.kr/G704-002007.2015..24.016>

신옥희, 『한미일 삼각안보체제: 형성·영향·전환』,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19.

유진석, 「핵억지 형성기 최초의 전쟁으로서 6·25전쟁과 미국의 핵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1, 89-118쪽.

<http://doi.org/10.17331/kwp.2011.27.2.004>

윤석정, 「이승만 정권과 일본의 재군비(1953-1955)」, 『일본공간』 제21호,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7, 128-159쪽.

<http://doi.org/10.35506/jspace.2017.21..004>

이규원, 「이승만 정부의 국방체제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http://uci.or.kr/G901:A-0005669269>

李東俊, 「韓米日安保体制の歴史的展開と「国連の権能」: 1950-70年代における米国の対日及び国連軍司令部政策を中心に於て」, 『日本研究論叢』 제28호, 現代日本學會, 2008, 83-113쪽.

<http://uci.or.kr/G704-001032.2008..28.009>

이연주, 『핵무기를 통한 예산절감 또는 안전보장?: 1958년 한반도 전술핵무기 배치와 미국의 선택』,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http://uci.or.kr/G901:A-0005870036>

이연주·이근욱, 「재정절감과 동맹국 안전 보장의 기로에서: 1958년 전술핵무기 배치에 대한 새로운 해석」, 『社會科學研究』 第23輯 2號,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126-156쪽.

<http://uci.or.kr/G704-001086.2015.23.2.004>

이재봉, 「남한의 핵무기 배치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평화학연구』 제9권 제3호, 세계평화통일학회, 2008, 23-44쪽.

<http://uci.or.kr/G704-002115.2008.9.3.009>

이종원, 「6·25전쟁과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의 변천」, 유영익·이채진 편, 『한국과 6·25전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

_____, 「전후 한일관계와 미국: 한미일 삼각관계의 변용과 지속」, 이원탁·기미야 다다시 외 지음, 『한일관계사 1965-2015: I.정치』, 서울: 역사공간, 2015.

이철순, 『이승만정권기 미국의 대한정책 연구(1948-1960)』,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정경두, 「미국의 동북아 위협인식 변화에 따른 한반도 내 전술핵무기의 역할 연구」, 『軍史』 第83號,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105-130쪽.

<http://doi.org/10.29212/mh.2012..83.105>

정영신, 『동아시아의 안보분업구조와 반(反)기지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조진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있어서의 '사전협의'의 의미와 실제」, 『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3호, 한국국방연구원, 2016, 9-41.

<http://uci.or.kr/G704-001646.2016.32.3.004>

차상철, 「아이젠하워, 이승만, 그리고 1950년대의 한미관계」, 『미국사연구』 제13집, 한국미국사학회, 2001, 121-167쪽.

<http://uci.or.kr/G901:A-0001488669>

최희식, 『전후 한일관계 70년: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 왔나』, 서울: 선인, 2016.

<http://uci.or.kr/G901:A-0006608068>

츠치야마 지츠오, 「미일동맹과 한미 안보 협력」, 『한일공동연구총서』 Vol.2007 No.9,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7, 130-169쪽.

<http://uci.or.kr/I410-ECN-0101-2014-900-003142945>

쿠라타 히테야, 「일·미·한 안보 제휴의 기원: '한국조항' 前史의 해석적 재검토」,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제3분과, 근·현대사편)』, 서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5.

피터 헤이스 지음·고대승·고경은 옮김, 『핵 딜레마: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의 뿌리와 전개과정』, 서울: 한울, 1993.

<http://uci.or.kr/G901:A-0008489762>

피터 헤이스·류바 자르스키·윌든 벨로 지음·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회 엮음, 『핵무기는 가라!: 미국 핵전략과 한반도 평화』, 서울: 민중사, 1988.

<http://uci.or.kr/G901:A-0008351823>

홍원표, 「일본의 잠재적 전력」, 『國防研究』 第1號,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1958, 115-144쪽.

<http://uci.or.kr/I410-ECN-0102-2009-390-000099644>

헨리 A. 키신저 著·李春根 譯, 『核武器와 外交政策』, 서울: 靑莪出版社, 1980.

<http://uci.or.kr/G901:A-0008325219>

Bacevich, Andrew J., *The Pentomic Era: The U.S. Army Between Korea and Vietnam*, Washington, D.C.: National Defence University Press, 1986.

Dockrill, Saki, *Eisenhower's New-Look National Security Policy, 1953-61*, London: Macmillan Press, 1996.

Endicott, John E., *Japan's Nuclear Option: Political, Technical, and Strategic factor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5. [재인용]

- Gaddis, John L., *Strategies of Containment: A Critical Appraisal of American National Security Policy During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1982].
- Gallicchio, Marc S., “The Best Defense Is a Good Offense: The Evolution of American Strategy in East Asia, 1953–1960”, I. Cohen, Warren and Iriye, Akira, *The great powers in East Asia, 1953–196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0.
- Guthrie–Shimizu, Sayuri.,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Cold War, 1945–1960”, p. Leffler, Melvyn and A. Westad, Odd,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ume I. Origi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Iriye, Akira and I. Cohen, Warr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Postwar World*, Lexington: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1989.
- Jones, Matthew D., *After Hiroshima: The United States, Race and Nuclear Weapons in Asia, 1945–196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Kristensen, Hans M. & Norris, Robert S., “A History of US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73–6 (2017).
- Mott IV, William H., *United States Military Assistance: An Empirical Perspective*. Westport: Greenwood Press, 2002.
- United Nations Command,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nited States Forces Korea, *[2018: The Year On Pen] U.S. Military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2019 Strategic Digest* (2019).

Operations Research Office, *Johns Hopkins University*,
Semi-Annual Report 9:2 (July-Dec.31, 1956) [재인용]
Walker, David M., *Eisenhower's New Look,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Limited War with a Case Study of the
Taiwan Strait Crisis of 1958*, Ph.D. Dissertation,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004.

(Abstract)

Reconsideration of the Factors in 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58

– Focusing on the Change of U.S. Policy toward Japan –

Kim, Min-sik

The ‘Japan’ factors were behind the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58. Previous studies about the process of 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analyzed this issue mainly in terms of U.S.–R.O.K. relations. However, U.S. political and military leaders in the 1950s focused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U.S.–R.O.K.–Japan in the establish of security policies in the Far East. The U.S. has decided to 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U.S. Forces in Korea as a result of political considerations about Japan.

In the mid–1950s, the U.S. government faced stubborn resistance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and public opinion against the U.S. nuclear strategy and rearmament policy of Japan.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U.S. foreign security policy was being formulated in a direction that emphasized the role of nuclear weapons and the local forces of allies. Given its political ripple effect, the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U.S. Forces in Korea was a much more reasonable and safer alternative than the deployment of tactical nuclear weapons to the U.S. forces in Japan.

In doing so, the U.S. also put strong pressure on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demanded a revision of the U.S.–Japan security treaty. It also included expectations that the modernization of U.S. Forces in Korea and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could stimulate rearmament of Japan Self–Defense Forces. As such, the U.S. decision to 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 reflected consideration of ‘Japan’ factors in various

aspects.

Keywords : Security Relations between the U.S-R.O.K-Japan,
U.S. Security Policy toward Far East, Tactical Nuclear Weapons,
U.S. Forces in Korea

